

국민 안전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통관단계 불법거래 차단 및 마약류 적극 관리감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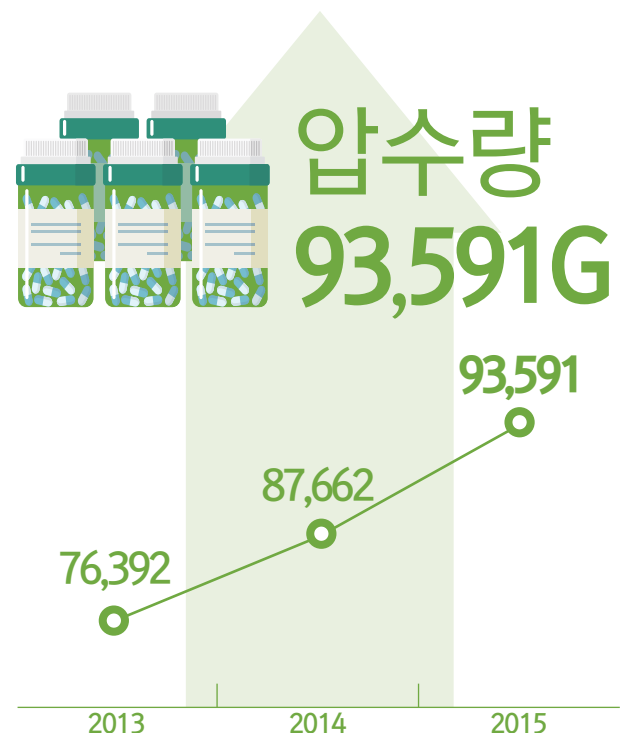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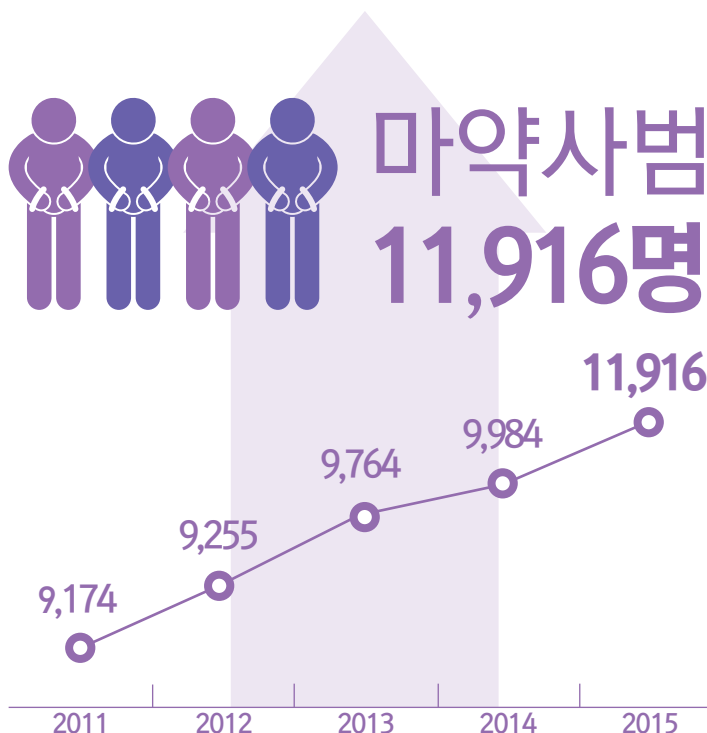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인터넷 · SNS · 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식약처 · 법무부 · 대검찰청 · 관세청 · 경찰청)는 지난 4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 · 안전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 SNS ·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마약류 :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총 339개 성분 지정, '15년)>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적발 · 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 · 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 실시 →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집중 검사〉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 '15년 112건 적발(전체 적발의 34%), 현재 인천·김포 등 7개 공항·항만에서 운영 중〉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하여('16.하반기)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적절히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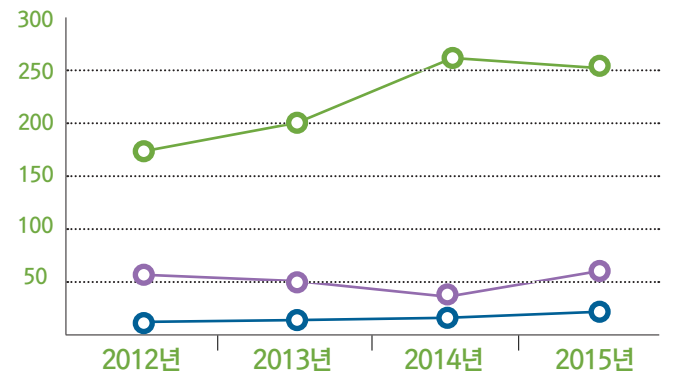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6.8)〉

마약류 일반입 적발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특송화물 국제우편	175	202	268	262
개인휴대물품	52	47	34	54
기타	5	5	6	9
합계	232	254	308	325

(단위: 건)



○ 휴대물품 ○ 국제우편·특송화물 ○ 기타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현황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
주요 단속내용	①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② 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 공급사범 ③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 ④ 클럽 주변 등 마약류 집단사용 가능성이 있는 장소 기획수사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을 위해 최초로 편성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도



2.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현재 총 73개 물질 관리 중, 식약처), ** (현재) 4~5개월 → (개선)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 추진 ('16.6)>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용 마약의 제조·수출입·유통·투약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현재 제약사·병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 (사례) '11년 환자 1명이 1년간 93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4,139일치를 처방 / '15년 성형외과 실장이 프로포폴 불법 과다 투약으로 사망, △ 의료용 마약('16) △ 항정신성의약품('17.하반기)>

3.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 '17, 56개소)하고, 再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

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현지출장조사·투약검사 등을 통해 전담 관리하는 제도>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전 · 후 비교

단계	업무내용	현행	개선사항
통관	특송화물 검색	■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X-ray 검사 실시 · 의심화물에 대해 세관 직원이 특송업체에 출장검사	▶ 특송물류센터 신설 ■ 특송업체 X-ray 검사 시 원격판독시스템으로 동시 검사 ·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전량 반입, 집중검사 실시
	마약범죄 정보 관리	■ 우범 정보, 적발사례, 은닉수법 등 수사 전파 · 공문 등을 통해 세관·마약조사 직원에 제공	▶ 마약정보포털 구축 ■ 우범 정보 등 실시간 공유(관세청 자체시스템 활용) · 정보 제공대상 확대(조사부서→통관부서)
유통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 서울중앙지검 중심 인터넷 마약범죄 전담수사팀 편성 및 모니터링 실시 · 단순 수작업 모니터링	▶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 사이트 즉각 폐쇄 조치
		■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규정 부재	▶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 등 광고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인터넷 마약사범 단속	■ (검찰)서울중앙지검 인터넷 마약범죄 전담수사팀 편성·운영 · 전국 검찰청 강력부에 모니터링 요원 배치 · 모니터링 통해 사이트 차단·폐쇄 및 인터넷 이용사범 수사 ■ (경찰)지방청 마약수사대, 거점지역 경찰서 전담팀	▶ 검·경 합동수사반 편성 ■ 대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 14개 '지역 합동수사반' 편성 · 인터넷 불법거래 집중단속 ·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사범 엄단 · 외국인 마약류 유통사범 철저 단속 등
투약 사용	신종마약류 관리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운영 · 지정에 총 4~5개월 소요	▶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 ■ 임시마약류 우선평가 · 총 2~3개월 내 지정완료
	의료용 마약류 관리	■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합동감시 등을 통해 점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제조·유통·투약 등 취급내역 상시 모니터링 · 불법유통 및 과다처방 방지
사후 관리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 26개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 보호관찰자 대상 비정기적 투약검사 · 반기별 1회	▶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 확대 ■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30개소 추가) ■ 투약검사 강화 · 재범 위험성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로 실시
	상습 투약자치료	■ 일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중독성이 심한 마약류사범 치료프로그램 연계	▶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 중독수준이 높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연계 후 상담 실시 · 한국중독전문가 협회 MOU 체결(2016.4월말) 추진
대국민 홍보	오남용 예방홍보	■ 식약처 위주의 대중매체, 박람회, 캠페인 등 홍보	▶ 관계부처 협력 집중홍보 ■ 부처별 홍보수단 공유 · 정책포털·전광판·페이스북 등 ■ 주요 행사기간 대국민 홍보 · 마약범죄 자수기간 등 ■ 콘텐츠 다양화로 맞춤형 홍보 · TV광고 및 웹드라마 제작 ■ 연령대별 사이버 교육 실시 ■ 상담콜센터 설치·운영